

## 제4차 산업혁명과 시민성

김경래\*

### <국문요약>

시대적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의 기술적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견해들 모두 민주주의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권력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시민성 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시민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적 변화를 야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민성에도 유효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인 시민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자유주의적 그리고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다. 시민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관련해 본 논문은 공동체 안에서 시민 개개인의 자유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신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인 자유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관련해 본 논문은 자의적 권력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스키너(Skinner)의 주장에 근거해 정치적 성취를 위한 시민적 덕성으로부터 자유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중요시 여기는 의무와 관련해 페티트(Pettit)의 비지배의 자유 개념에서 의무를 위한 법의 준수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곧 자의적 권력의 부재와 비지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야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제4차 산업혁명, 불평등, 시민성, 비지배의 자유, 자의적 권력의 부재

---

\* 김경래 (E-mail: kimkr@kookmin.ac.kr)  
 학위취득대학: 자유베를린 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현직: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논문접수일: 2017년 10월 5일, 논문수정일: 2017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1월 6일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itizenship

Kim, Kyung-rae

##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topic of the times, is characterized by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of physics, digital and biology that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a paradigm shift in society. Bo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mphasize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This is becaus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ausing a concentration of powe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citizenship for strengthening democracy, and citizenship need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paradigmatic changes to be expected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 a shift of thinking to match them. This transformation of thinking is also valid for citizenship for the smooth functioning of democracy. With regard to the transformation of thinking about citizenship, this paper suggests the need to discuss rights and obligations from a neo-republican perspective in order to articulat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dividual citizens in the community. In relation to the transformation of thinking about freedom, which is an important value from a libertarian point of view, this paper has sought the meaning of freedom from civic virtue for political achievement based on Skinner's argument that it can be found in the absence of arbitrary power. We have also worked Pettit's view of compliance with the duty of duty in the concept of freedom of non-domination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of importance from a republican point of view. Such attempt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democracy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power, based on the absence of arbitrary power and the freedom of non-domination.

**[Key wo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equality, citizenship, freedom as the absence of the Arbitrary, Freedom of Anti-power*

## I. 서론

제4차 산업혁명 원래 이 용어는 2011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되었다.<sup>1)</sup> 국제사회에서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노버 박람회에서 제안된 개념이었다. 이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이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디지털 기술이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영역과 융합되어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으로 나타나는 기술혁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3월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 대선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 등을 계기로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용어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제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였다. 비판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제시된 것이 2016으로 5년 사이에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비롯된다. 비판의 핵심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요소들은 컴퓨

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다른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이해는 이의 수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이 저성장에 빠져 있는 세계경제를 구할 수 있는 계기이며 성공을 위해 상황 맥락 지능(정신), 정서 지능(마음), 영감 지능(영혼), 신체 지능(몸) 네 가지 기능을 키우고 적용하여 파괴적 혁신이 가진 잠재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슈밥 2016, 251-257). 또 에릭 브린욘프슨(Erik Brynjolfsson)과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는 제4차 산업이 현재 보다 더 적은 시간 일을 함에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14).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낙관적인 기대로 인해 오히려 미래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디지털 혁신이 과거 세탁기, 자동차 등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로버트 제이 고든(Robert J. Gordon)은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이 실생활과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주었다면 대표적인 첨단기술 국가인 미국의 경제생산율이 과거보다 감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결코 기술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대립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관론이 과학 기술의 진보, 발전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든(Gordon)은 과거의 비행기, 전기와 같은 혁신이 현 시점에 더욱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단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를

1) 2011년 하노버 박람회 당시 독일 연방정부는 경제계, 학계, 정치계와 함께 “산업 4.0: 사물인터넷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길로”를 발표하였다. in . [http://www.wolfgang-wahlster.de/wordpress/wp-content/uploads/Industrie\\_4\\_0\\_Mit\\_dem\\_Internet\\_der\\_Dinge\\_auf\\_dem\\_Weg\\_zu\\_r\\_vierten\\_industriellen\\_Revolution\\_2.pdf](http://www.wolfgang-wahlster.de/wordpress/wp-content/uploads/Industrie_4_0_Mit_dem_Internet_der_Dinge_auf_dem_Weg_zu_r_vierten_industriellen_Revolution_2.pdf) (검색일 2017. 09. 12)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실용적 낙관론자인 슈밥(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과 더불어 불평등과 비인간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의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해 고든(Gordon)은 정보통신 기술이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브린올프슨(Brynjolfsson), 맥아피(Andrew McAfee) 그리고 스펜스(Michael Spence)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과 보수의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공평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로 창의적 역량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2016).

결국 낙관론, 비관론 모두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한 제4차 산업혁명이 부의 불평등과 비인간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인 슈밥(Schwab)은 포괄적인 공동의 담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대책의 필요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이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성패가 갈린다.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 현실적 운용에 있어 각 나라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 그 운용과 관련된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태

도를 다른 차원에서 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포용적 담론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영향

### 1.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

혁명이란 1789년의 프랑스 혁명과 같이 근본적으로 통치형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이 산업과 연결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 경제체제, 사회구조, 문화적 가치 등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시작되어 생산방식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즉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 그리고 가내 수공업 중심의 생산방식이 공장 중심의 생산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는 또한 도시화를 야기하였고 사람들의 생활, 의식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과학이 기술에 접목되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새로운 동력원으로 전기, 석유가 기존의 증기력을 대체하면서 화학, 철강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테일러주의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대량생산체제와 자동화를 이루어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명을 의미한다. 1946년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 에니악(ENIAC :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alculator)에서 출발, 1976-1977년 애플 컴퓨터, 1981년 IBM의 호환용 PC 그리고 컴퓨터의 대중화, 1969년의 아르파넷의 출현 이후 1994년 대중화 단계에 들어간 인터넷, 1973년 DNA 재조합, 1974년 세포융합 기술을 계기로 출현한 생명공학으로 야기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리프킨(Rifkin 2012)은 인터넷과 재생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산업혁명으로 상호의존적 경제활동이 보다 밀접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며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소통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기를 제시하였다. 이는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세계화로 표현되는 모습에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슈밥(Schwab 2016, 25)이 제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현한 것으로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디지털,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 기술혁신이 서로 융합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인공지능을 갖춘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결국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 각 분야의 최고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으로 드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의 분야의 과학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처럼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반론이 있다. 이러한 반론의 핵심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산업혁명처럼 사회, 경제구조와 문화적

차원에서 변화가 없는 단지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슈밥(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시기와 구별되는 점을 속도, 범위와 깊이 그리고 시스템 충격 3가지 차원으로 제시한다. 속도와 관련해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신기술이 보다 새롭고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범위와 깊이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인, 경제, 기업, 사회에 유례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범위와 깊이는 국가들 간, 산업 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생산, 경영, 거버넌스, 및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슈밥 2016, 13).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파급 효과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빠르고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2.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

제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제2차 산업혁명의 전자화, 제3차 산업혁명의 자동화를 조합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융합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초융합성은 무엇보다 물리학적 기술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디지털 기술의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 그리고 생물학적 기술의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 그리고 이 각각의 기술이 동시에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차 산업의 초융합성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라는 특징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초연결성이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초연결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특징을 뜻한다. 사

물인터넷은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 또는 기계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람과 도시들을 하나를 묶어 내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초지능성이란 빅데이터와 딥러닝(Deep learning)을 바탕으로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알파고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에게는 1000년이 걸리는 100만 번의 대국 학습에 단 4주의 시간만이 소요된다. 딥 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처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로 알파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경우의 수를 인간의 두뇌처럼 패턴 인식을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의 초융합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로 IBM의 왓슨(Watson)과 스마트 공장을 생각할 수 있다. IBM의 왓슨은 암환자의 치료와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의사이다. 1200만 쪽에 달하는 의학전문자료를 학습하였고, 2012년 레지던트로 암환자 진료를 시작한 이후 계속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환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몇 초 만에 환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제조 전체 과정을 자동화, 지능화해 최소의 비용, 시간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생산시설의 무인화, 자동화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생산과정 전체가 사물인터넷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결해 최적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장과의 차이를 보인다.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결, 수집,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3차원 인쇄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

의 생산을 위해 자유자재로 생산과정의 변경이 가능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가능하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 즉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익 창출의 장을 만들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새로운 산업, 경제체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을 단지 과학기술의 진보로만 이해할 경우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과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은 제1차 산업혁명 이후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과학기술 자체의 변화 발전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4차 산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갖는 진정한 영향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융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서 찾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우리 인류에게 야기된 변화 즉 세탁기의 발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보다 인류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산업, 경제 및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여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대를 제시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상충은 제4차 산업혁명의 낙관론적인 견해와 이 용어의 불명확성을 제시하는 신중론 간의 대립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하는 논의들이 인공지능

요리사, 인공지능 의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각 국가마다 다른 양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들이 야기할 문제점에 대해 양측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고용의 변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국제사회에 던진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대략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일반사무직, 제조업, 예술 분야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에 컴퓨터, 수학 등의 분야에서 200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16, 13).<sup>2)</sup> 로봇에 의해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될 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순, 반복적인 사무행정 또는 저숙련 일자리기 때문이다.<sup>3)</sup>

이에 대해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가디언(The Guardian 2015. 8. 17)은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Deloitte)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871년부터 2011년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즉 기술 발전은 구매력의 증가로 연결되었고 이는 다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감소가 있었지만 이 인력이 돌봄 영역, 지식 집약적 영역, 첨단 기술 영역 및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고용상승으로 상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전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제4차 산업혁명에도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먼저 당시에는 농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던 인력이 다른 직업군으로의 이동을 통해 고용감소가 상쇄될 수 있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저숙련 업무의 계속적인 자동화로 노동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중간 숙련 직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Baweja and Donovan et al. 2016, 14-15). 슈밥(Klaus Schwab) 또한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프레이와 오스본(Frey and Osborne 2017)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3차 산업혁명에 비해 일자리 파괴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문직과 창의성을 요하는 직군, 저소득 노무직에서는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중간소득층의 단순 반복 업무 일자

2) 세계경제포럼의 이 예상치는 세계 주요 15개국의 9개 산업에서 약 1,350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한 371개 기업의 인적자원 담당 경영자를 대상으로 2015~2020년 동안 직업군별로 예상되는 고용 변화를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3) 카를 베네딕트 프레이(Carl Benedikt Frey)와 마이클 오스본(Michael Osborne)은 702가지의 직업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직업과 그렇지 않을 직업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직업으로 텔레마케터, 보험업자, 화물운송업, 운전기사, 영업사원, 회계사, 모델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한 치료 전문가, 헬스케어 부문 사회복지사, 영양사, 심리학자 등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직업으로 분류되었다(Frey and Osborne 2017, 269-278).

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슈밥 2016, 70). 이러한 중간층 노동력 감소는 유럽, 미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력의 양극화로 귀결된다. 1993~2010년 동안 EU 16개국의 직업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임금 일자리가 크게 늘고 저임금 일자리가 소폭 늘어난 것에 비해, 중간 임금 일자리는 예외 없이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 또한 1990~2010년 동안 고임금 일자리인 경영자와 저임금 일자리인 서비스직이 증가한 반면, 중간 임금 일자리는 크게 감소하였다(정원호·이상준·강남훈 2016, 23).

일자리 감소가 중간 임금 일자리의 감소로 연결되면서 그 귀결은 노동력의 양극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균형 즉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임금, 생산성이 증가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였다. 그러나 브리놀프슨과 맥아피(Brynjolfsson and McAfee 2014)는 최근 임금은 생산성의 향상만큼 인상되지 않는다는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면서 불평등의 주된 원인을 ‘기술의 기하급수적 성장, 디지털화, 조합적 혁신’에서 찾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은 증가하지만,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훨씬 덜 해주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지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혁신할 수 있는 소수의 슈퍼스타에 의한 승자 독식의 경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브리놀프슨·맥아피 2014, 188-206; 브리놀프슨·맥아피 외 2016, 133-148).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결코 일국적인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 역사는 기술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통신과 거래비용을 낮추면서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 공장의 출현은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한다. 이는 결국 리쇼어링(Reshoring)현상을 야기할 것이고 생산기지로서 자본을 축적하고 선진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던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투자, 운전 등은 분명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인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적인 과학기술의 진보는 단지 상상에 머물렀던 생명 연장, 맞춤형 아기, 기억 추출 등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 자체가 하나의 지능을 가진 기계로 간주되어 조작과 시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러한 의문은 단지 과학기술의 남용의 문제가 아니다. 생물학적이거나, 사회적인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을 갖고 있는 인격체로 간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진보로 로봇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될 때 인간은 무엇을 인격체로서 자신의 존엄을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그 의미성이 클 수밖에 없다.



### Ⅲ. 제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수 있는 불평등의 심화는 결국 공동체의 운영 원리와 삶의 원칙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 연결된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평등은 일국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sup>4)</sup> 이는 단순히 제도를 통한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시민성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통치 받는 사람이 곧 통치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정되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 동력인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학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정인경 2015).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원자력 공론화 위원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력인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위험, 불확

실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시민적 참여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에 적합한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쉬운 것이 기계에게는 어렵고 기계에게는 쉬운 것이 인간에게는 어렵다는 모라벡의 역설은 아직 유효하지만 다른 한편 설득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알고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기계학습의 새로운 장을 연 딥러닝을 통해 의사, 법률가, 통역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연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비록 용어의 의미에 모호성이 있지만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야기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계에 의한 인간의 일자리 파괴는 비단 제4차 산업혁명 오늘날의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는 기계 대 인간의 대결구도를 설정함으로써 그 원인을 기술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 전제는 바로 기술발전이 불가항력, 필연적인 것이고 따라서 기술의 변화, 발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과로 연결된다(손화철 2017, 25-27).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제2차 산업혁명과 제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력과 정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과거보다 분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분산되었을 때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을 목격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의 거부가 아니라 그 기술에

4) 옥스팜(Oxfam 2017)이 지난 1월 스위스 금융기업 크레디트 스위스의 세계 재산동향 보고서를 참조해 발표한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최대 부호 8명의 보유 재산이 전 세계 인구 하위 5%의 재산과 같다.

대한 지배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 또는 문제를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통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물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 IV. 시민과 민주주의

시민이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해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보다 공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idiotes)과 반대되는 사람이 시민이었다는 고대 그리스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고대 그리스의 모든 사람이 시민이 될 수는 없었다. 재산과 혈통을 중심으로 20세 이상의 남성이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귀족 출신이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같은 공동체(polis)의 구성원일지라도 여성, 외국인, 노예에게는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로마시기를 황제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통치가 아닌 법에 근거해 권리를 부여받은 로마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로마 제국으로 확대되면서 정복지의 구성원에게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시민의 자격이 부여되었다. 비록 고대 그리스와 달리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오늘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시민이 될 자격을 갖게 되는 계기는 프랑스 혁명이었다. 당시 국민의회가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제1조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제6조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은 기존 사회에 있던 모든 특권의 폐지와 모든 개인이 시민으로서 법적, 정치적으로 평등함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공공의 사안에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부르주아들은 노동자, 농민들과는 다른 별개의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였고, 이들을 시민에서 배제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산, 성, 학력에 관계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공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이 주어진 것은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국에서도 1928년에야 달성되었다.<sup>5)</sup>

5)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선거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의 경우 1832년 이후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계속 확대되었다. 1832년 당시에는 일정한 액수 이상의 지대 납부 또는 집을 보유한 남성만이 시민이 될 수 있었다. 당시 전체 인구 30명 중 1명, 성인 남자 7명 중 1명이 시민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노동자, 여성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1867년 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지방세를 내는 모든 가구의 가장, 연간 10파운드의 집세를 내는 남성으로 시민의 자격이 확대되어 인구의 1/12, 성인 남자 3명 중 1명이 시민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1884년에는 모든 시나 군단위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가구의 가장은 12개월 거주라는 조건하에 시민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인 남자 2/3가 시민이었다. 1918년에는 21세 이상의 성년 남성은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30세 이상의 여성 중 본인이 지방자치정부의 선거명부에 올라 있거나 남편이 올라 있는 경우 또는 대학을 졸업한 여성만이 시민이 될 수 있었다. 학력, 성, 재산에 관계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든 사람이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1928년 국민평등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이처럼 소수의 특권을 갖은 사람에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역사적 변화는 민주주의의 확산, 심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편적 지위로서의 시민의 자격은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은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 또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표현 그리고 그 구체적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미 2천 년 전에 그리스의 플라톤이 지적했다고 하는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해 시민 역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라 할 수 있다.

## 1. 시민성

누가 시민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대두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시민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즉 자질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권력을 갖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통치를 받는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권리와 의무이다. 즉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무엇

가능해졌다(이남희 2013, 137-140).

보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시민성을 권리와 의무로 표현하는 것은 두 이론적 흐름의 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권리와 의무를 논함에 있어 이 두 흐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1) 자유주의 시민성

자유주의 시민성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그 출발점은 개인의 자유이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길로 강제로 끌려가는 것 보다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밀(John Stuart Mill)의 표현에서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의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다(Mill 2010, 37-38). 결국 자유란 자신 스스로 선택,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유에 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발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당연히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사적 영역이 개인의 삶에서의 만족 그리고 국가와 같은 개인 이외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신에게 부여되는 제약을 최소화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삶이 최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일수 2011, 14). 로크(Locke)의 논의를 빌리면 사적 영역인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재산, 생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개인들은 자유로운 동의하에 국가, 정부라는 공적 영역을 구성해 자신의 재산, 생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 정부라는 공적 영역이 개인의 재

산,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면 언제든지 개인들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로크(Locke)의 이러한 논리는 공적 영역의 기능이 사적 영역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벌린(Berlin)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자유는 타인 또는 공권력과 같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는 합리적으로 결정,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자기지배를 의미한다(문지영 2009, 70). 그런데 벌린(Berlin)은 이 적극적 자유의 자기지배가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나 결국 새로운 억압으로 귀결되었다. 벌린(Berlin)의 관점으로 보면 자율적 행동, 자기지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참여라는 적극적 자유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영역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자유주의적 시민성의 또 다른 한 축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권리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권리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권리로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자유를 권리의 토대로 상정하는 것이다(설한 2015, 93). 결국 자유를 누리기 위한 권리로 자유주의적 시민성에서 권리가 핵심적 요소가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에서의 권리 개념의 출발점은 자연권과 사회계약론이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정치공동체의 형성은 개인의 생

명, 재산과 같은 자연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천부인권인 자연권이다. 권리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이후 칸트(Kant)를 비롯해 노직(Nozick), 롤즈(Rawls) 등의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그 핵심은 모든 개인은 자신 이외의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절대적으로 침해받을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공동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 정부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정부, 국가와 같은 정치권력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보호할 때만 확보되는 것으로 가능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정부는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 노력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권리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권력이 공동체 구성원들인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의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규정된 법에 의해서만 강제될 수 있다(김상돈 2014, 466-467).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시민권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홉스(Hobbes), 로크(Locke) 등의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에 의해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국가로부터 자신의 생명,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시민권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권 연구의 선구자 중 하나인 토마스 험프리 마셜(Thomas Humphrey Marshall 2014, 30-31)은 시민권을 세 부분 즉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부분 또는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공민적 요소는 자유를 위해 필요한 권리로 신체의 자유, 사상·신앙의 자유, 재산 소유와

이를 바탕으로 유효한 계약을 맺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적 권리로 이해된다. 정치적 요소는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는 기구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즉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요소는 경제적 복지의 보장과 사회적 유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누릴 권리,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의 문명화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 건강, 실업 보험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사회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샬(Marshall 2014, 35)은 이러한 권리들의 분리가 너무나 명확하며 시기적으로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으로 발전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권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 대해 단계론적이며 진화론적 접근으로 인해 한 시기에 여러 시민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장미경 2001, 64-65). 그러나 다른 한편 영국의 경험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시민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시민권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정치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제도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김윤태 2013, 7). 즉 마샬(Marshall)에 의해 시민권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시민권은 정치제도와와의 연관성 속에서 제도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에 의하면 시민은 결국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를 위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마샬(Marshall)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공화주의의 시민성

공화주의의 시민성은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의 기본 사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공화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 가치와 관련해 어느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통된 요소와 관련해 시민성과 연관될 수 있는 가치로 자가지배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가지배 가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연결된 것으로 정치공동체에의 참여에 대한 문제이다. 참여는 의사결정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주의의 또 다른 가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이다. 공동선이란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구성원의 이익이 단순히 개개인의 이익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공동체에서 한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손실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동선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동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분배되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시민적 덕성이란 한마디로 공적 관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 민주적 문화, 공적 태도를 의미한다(조일수 2012 304). 이러한 태도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자유와 공동선의 실천으로서의 시민적 덕성, 정치참여를 통해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닌 공동선의 추구 및 자가지배 및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적 덕성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의존

성, 연대성의 인정, 자기성찰적 정치 참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 등이 있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논의의 공통적인 점은 시민은 다른 사람과의 연대성을 인정하면서 자기성찰적 민주적 정치 참여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조일수 2012, 305-306).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이란 시민들이 공동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의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 또는 공동체 전체에게 좋은 것을 자발적으로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의 자지배를 핵심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국 공동선에 대한 자각적 헌신 또는 사적 욕망이 아닌 공동체에 우선성을 두는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성을 공화주의적 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바로 권리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나의 권리가 관철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권리라는 것이 가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 있는 제도에 의존한다. 즉 권리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틀 속에서 타인이 이를 받아들여주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설한 2015, 96-97).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동물인 우리 인간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하게 될 때 자유롭다. 참여를 통해 자지배의 원칙이 관철됨으로써 ‘주인에게 종

속된 노예가 누릴 수 없는 자유’ 그리고 ‘독재자나 다른 국가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Iseult Honohan 2002). 이러한 자유 즉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참여는 권리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 참여를 통해 자유로운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참여를 통한 자지배는 동시에 지배받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지배라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결국 자지배라는 정치적 자유와 지배받아야 하는 정치적 의무는 동일한 것이 된다. 이러한 지배하는 자유 그리고 지배받는 의무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보는 견해는 루소(Rousseau)에게서도 발견된다.<sup>6)</sup> 이러한 의미에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적 덕성을 갖고 자유를 누리며 의무를 행사하는 자질을 갖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 3)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시민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은 서로 상이하며 모순되는 내용을 갖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성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서 서로 강조점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인간은 자율적 판단 능력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6) 루소에게서는 모든 시민이 통치가 아닌 입법에 참여하는 방식의 공동지배의 자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동일 2017, 22).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간섭의 부재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는 인간의 자아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이 사회적 영역에 중점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타인의 도움, 협력을 거부한 채 독립적인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불가능하다. 테일러(Taylor)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원자주의(atomism)’라고 칭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을 하는 능력과 이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사회 속에서의 공통적인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월 김리카 2006, 342). 이러한 논의는 결국 자유를 위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이 갖는 자유의 근거가 되는 공동체와 관련 없는 자아 즉 무책임한 시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또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시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주어진다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선이 성취될 것이라는 명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특정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권리의 법적인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이 보장된다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자유주의적 시민성이 강조하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시민권의 형태로 법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 마샬(Marshall)이 제기하는 사회적 시민권은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가 모순되는 측면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의 시민권 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계기 중 하나인 1980년대 영국 대처(Thatcher) 수

상 집권 이후 시민권의 심각한 후퇴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특정한 이상을 추구한다.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이 강조하는 자유를 위한 권리는 절대왕정으로부터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에 대한 주장이 현실에서 사회의 생산적 담론보다는 갈등과 분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시민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면 의료, 급식, 교육에 있어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현실에서는 항상 논쟁적이다. 둘째 시민들 간의 권리 충돌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시민들 각자가 이성을 갖고 최선의 선택을 한 상황에서 누구의 권리가 먼저 행사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가 샌델(Michael Sandel)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통해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샌델(Sandel)은 전국적 차원의 정치권력이 아닌 정치의 단위를 작게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정치 참여를 주장한다. 왈저(Walzer)는 이러한 주장에 다원주의와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충돌을 지적한다. 이민(immigration)을 통해 다원주의를 형성한 미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샌델(Sandel)의 주장은 다원주의와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충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민자들은 정치공동체인 국가에 대한 애착보다는 그 국가에서 자신들이 형성한 공동체에 대해 더 큰 애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체체제에 적극적인 참여라는 시민적 덕성보다는 자신

들의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Walzer 1998, 175-177). 왈저(Walzer)의 이러한 주장은 시민적 덕성이 갖고 있는 보편적 지향성과 다원주의의 특수성 지향이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자 동시에 공화주의적 시민성과 다원주의가 서로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지적이 차이의 정치를 주장하는 논자들에게 의해서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아이리스 영(Iris Marion Young 1976, 117)은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관점에 따르면 차이에 대한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공동선 또는 일반의지 등과 같은 보편적 관점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특수성, 차이를 뒤로 해야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보편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갖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의 극복을 위한 사고의 전환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시민성 모색을 위한 출발점이다.

## V.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시민성의 모색

시민성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절대적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공화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시민성과 그러한 시민성의 함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신중섭 2016: 김상범 2012: 조일수 2011:김상현·김희용 2010:곽준혁 2008). 이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에게 강조되는 시민적 덕성,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강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민성에 관한 논의도 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의 변화, 발전은 경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합성생물학을 바탕으로 초연결, 초융합의 특징을 갖는 제4차 산업혁명 또한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 사회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탐색』 제목의 연구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민성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민성<sup>7)</sup>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온라인 참여와 바람직한 실행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체제 변화 및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능동성, 역동적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김봉섭·김현철 외 2017, 72-73). 또한 시민성의 함양을 위해 “확장된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알고 기꺼이 그러한 부담을 감당하려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봉섭·김현철 외 2017, 66).

새로운 기술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먼

7) “디지털 시민성은 미래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술을 미리 준비하고 또한 현재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방식이자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로 연결되어 새로운 사회를 야기한다. 새로운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성의 핵심적 측면은 의무,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권리, 의무, 책임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로 하다.

이와 관련해 그 출발점으로 먼저 자유주의적 시민성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다.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수구성은 오랜 논쟁적인 주제이다. 즉 자유주의는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명 특정 사람들을 위한 계급적 성향을 보였다. 정복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재산은 빼앗을 수 없다는 로크(Locke)의 주장,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은 노동자의 버릇을 망친다는 볼테르(Voltaire)의 주장 그리고 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산자들이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분명 그 계급적 성격을 보여준다(이근식 2009, 48). 이러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시민혁명을 성공한 후 부르주아들은 자신들만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계급적 성격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모든 개인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의 시민사상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절대군주제를 붕괴시키고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적 틀을 정착시켰다는 나름의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유주의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먼저 자유주의가 갖는 계급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역사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을 복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의 또 다른 예로 자유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전제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우리 인간들은 타인의 기쁨, 슬픔, 분노 등을 감정

을 느끼는 공감(sympathy)능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즉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상상해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인간은 타인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를 형성하게 된다. 즉 타인과 내가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나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정한 관찰자는 간혹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면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나의 자율적인 선택, 노력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 능력과 인간의 불완전성은 결국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스미스(Smith)가 주장하는 자본주의는 결코 무한 경쟁이 아닌 타인과의 공감 속에서 하는 경쟁이다.

## 1. 자유: 자의적 권력의 부재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이 자유는 결코 개별적 자유 즉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무지, 미신, 강박 관념, 습관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사회적 자유로 사상, 결사, 정치참여 등과 관련된 자유이다(이근식 2009, 19). 이는 결국 개인이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밀(Mill)이 주장하는 “자유란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또는 사회적 자유다. 바꾸어 말하여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권력 행사의 한계 문제” 이 표현에서 확인된다(이근식 2009, 19 재인용). 따라서 자유를 강제, 억압의 부재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와 같은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민적 덕성을 자유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Quentin Skinner 1992).

스키너는 이러한 자유개념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상의 자유는 강제적 제약의 부재이다. 스킨너(Skinner)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 좀 더 넓고, 깊이 있으며 민주주의적인 사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스키너 2007, 12). 스킨너(Skinner)는 17세기 영국 의회파가 왕권에 대항해 싸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제시한 자유에 대한 관점이 민주주의적 자유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의회파는 법의 지배하에서도 인간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부당한 간섭 없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인이자 않아도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그 언제라도 자신이 누리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달려 있다면 그가 현재 아무리 자유를 마음껏 누리더라도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요소로 제시하는 것이 실정법 하에서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그 어떤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스키너 2007, 14).

이러한 주장은 자유를 간섭의 부재가 아닌 자의적 권력의 부재임을 의미한다. 선한 권력자에 의해 현재 그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고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한 권력자가 언제 자유를 박탈할지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점이 스킨너(Skinner)가 제시하는 자유의 핵심적 논제이다. 따라서 자유를 이야기 할 때 인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킨너(Skinner)는 시민들이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자치를 실현하는 자유공동체, 자유국가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스킨너(Skinner)에게 있어 자유는 정치적인 성취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시민적 덕성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조승래 2014, 64).

따라서 개인적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통치에 참여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의 공적 영역에 적극 동참해 그 어느 개인, 집단이 다른 타인 또는 집단을 강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가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스킨너(Skinner)가 강조하는 바는 공동선의 추구가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공동선의 추구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선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이다(조승래 2014, 65).

## 2. 법 준수의 의무

시민성의 다른 한 축인 의무와 관련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의무와 자유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나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의무에 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립 페티(Philip Pettit)의 비지배의 자유 개념은 이러한 사고의 전환에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페티(Pettit)에게 있어 자유의 반대는 지배 또는 예속으로 “타인의 자의적 간섭에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음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의미하고 비지배란 “자의적 기준에서 행해지는 외부적 간섭에 개인이 영향을 받지 않고 다소 두드러지게 안전한 조건”을 뜻한다(필립 페티 2012, 24). 이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스킨너(Skinner)의 자의적 권력의 부재와 비슷한 개념으로 타인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주어도 스스로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사람은 지배 또는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페티(Pettit 2012, 91-92)은 이러한 비지배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법의 지배를 제시한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 개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이다(정태창 2013, 133).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자유는 공정한 법의 지배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페티(Pettit)이 말하는 비지배의 자유를 위해서는 결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타인을 지배하지 않아야 하며,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법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개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는 수행해야 할 의무 즉 법의 내용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체제가 비지배의 자유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Pettit 2012, 341). 법의 내용이 공정하고, 그에 맞는 정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법 제정,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가능하

다. 이는 순환논법에 빠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논리에 휩쓸려 개인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3. 자의적 권력의 부재와 법 준수 의무의 의미

앞에서 언급한 자유와 의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이의 실현을 위한 권리 즉 시민권에 있어서도 그 확대가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권리는 천부인권에서 출발한 인권이다. 이러한 인권은 도덕적, 당위적, 추상적인 것으로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시민권이다(최현 2008, 17). 절대왕정의 붕괴 후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시민권은 노동계급 그리고 여성에게로 확대되었다. 시민권의 구체적 내용 또한 확대되어 왔다. 마셜(Marshall)이 제기하는 18세기 시민적 권리, 19세기 정치적 권리 그리고 20세기 사회적 권리의 확대는 시민권의 구체적 내용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민권은 또한 현실에서 일정한 경계 즉 국민 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현실에 근거한 시민권은 영토라는 경계를 기반으로 인권의 가치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시민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던 인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경, 인종, 성별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가치로 국제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이념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이념으로서의 인권은 크게 3단계의 발전 경로로 나타났다. 1세대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와 시민

사이의 기본권, 2세대 인권으로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것으로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3세대 인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집단의 권리 또는 연대권이라고 한다. 이는 인민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자연자원 접근권, 문화유산 향유권, 지속가능성 추구권, 커뮤니케이션, 인도적 지원 등 집단 전체에 해당되는 권리이다(조효제 2015, 120-122).

이처럼 인권과 시민권은 서로 중첩되어 있고 인권이 하나의 가치라고 한다면 시민권은 인권의 가치를 정치공동체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틀로 제시된 것이다.

세계화가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시민성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국가를 경계로 한 시민권을 지구시민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갖는 국가경계를 넘어서서 권리의 행사에 대한 의무를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스킨너(Skinner)가 제시한 자유 즉 자의적 권력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권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한 정치공동체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극빈층, 장애인, 난민, 소수민족, 불법이민자 등 소수집단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 인권과 시민권이 중첩되어 발전되어 왔고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시민권의 평가 기준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시민권은 3세대 인권인 집단의 권리(연대권)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고려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의미가 크다. 합성생물학,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자연적 발생이 아닌 인공적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인조인간, 로봇이 인

간과 공존하는 시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의 도움으로 일상의 삶을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중 이들에게 동료애를 느끼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까?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의 인격체인가? 이 물음은 생명공학, 인공 지능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논쟁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자유, 권리, 의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의적 권력의 부재라는 자유를 위해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가라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최현 2008, 127).

비지배의 자유의 증진을 위한 법 준수 의무를 위한 전제로 페티(Pettit 2015, 341)은 첫째, '정부가 법의 제국이라는 수단에 의한 운영' 둘째, '법에 의해 인정된 권력', 셋째, 권력이 '서로 다른 개인, 기구들에게 분산'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의 사결정권을 다양한 공적 권위에 맡김으로써 자의적 권력을 배제해 비지배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충실한 의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한 법제정과 집행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 분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페티(Pettit)이 생각하는 점은 공직자, 전문가들에 의한 자의적 법 해석, 집행을 저지하고자 함이다. 이는 특히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지배 자유의 증진 곧 의무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 즉 통치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과 사고를 따르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페티(Pettit)은 또한 견제력의 문제를 제기된다. 이는 공적의사 결정에 대한 견제력을 의미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로 동의  
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페티(Pettit)은 견  
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민주주의 정부란 곧 정부의 결정에 대  
해 개인, 집단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어야지 인민에 의한 통치라 할 수 있  
다는 것이다.<sup>8)</sup>

이 논의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의무를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 그리고 공정한  
법 집행, 견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  
로 관료집단, 전문과학기술 집단에 의한 일방  
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견제력은 결국 시민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견제력에 대한 강조는 무엇보다 제4차 산  
업혁명을 추진하는 원동력인 과학기술이 공동  
체에 가할 위협,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시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 VI. 나가며

제4차 산업혁명은 시대의 화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에 있어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  
한다. 과연 혁명으로 불리만큼 기술적인 변화  
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또는 그러한 기  
술적 변화가 실생활과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출발점은 두 가지다. 먼저 이러  
한 상반된 견해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들은  
과학기술의 변화, 발전이 결코 긍정적 변화만

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  
한 과학기술의 변화, 발전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결코 긍정적인 변화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  
끄는 과학기술의 변화, 발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현성이 핵  
심이 될 수 있다.

포괄적인 공동의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의 변화  
에 대비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사회를 위해 필  
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강화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  
람들에 의해 그 성패가 갈린다. 정치적으로 민  
주주의 제도를 확립해 실행하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관련  
해 본 논문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결코 어느 한 순간에 생성된 개념이 아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는 시민 개념과  
누가 시민인가 즉 그 범주의 확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시  
민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을 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질과 능력과 관련해 민주주의 사  
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표현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유를 위한 권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공화주의적 논의들의 접  
점이다.

패러다임적 변화를 초래하는 제4차 산업혁  
명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의무와

8) 페티(Pettit) 정부에 대한 견해는 다음에서 잘 묘  
사되고 있다. “정부가 가능한 한 조작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의 형식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반면,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재량적 의사결정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아야 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지  
배의 형태를 대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견제력이  
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페티 2012,  
346).

권리 또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이며 어떠한 의무인가에 대한 논의로 좀 더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의 변화, 발전이 인간에게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권리는 자유를 위한 권리로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유이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또한 의무는 사회적, 정치적 동물인 우리 인간들의 삶을 위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이다.

현실적으로 두 논의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논의에서 그 출발점을 삼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공화주의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화주의적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 논의들의 출발점은 자유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의적 권력의 부재 그리고 비지배의 자유 두 개념에서 자유와 의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위해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자의적 권력의 부재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과정에서 제시되는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평등한 지위를 누리는 그리고 이를 위해 그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해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성격이 중요하다.

비지배의 자유 또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라는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어떤 타인, 제도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행해지는 외부적 간섭에 개인이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의 지배이며 이 법의 지배는 곧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지배의 자유는 공정한 법을 중요시 여긴다. 공정한 법의 제정과 집행은 바로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타인이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를 누리기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자유로운 견제력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집중에 있다. 즉 경제적 권력의 집중 또는 과학기술 정책의 관리, 집행에 있어 권력의 집중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모든 구성원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원칙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권력의 다원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의적 권력의 자유, 비지배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권리와 의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준혁. 2008.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 『대한정치학회보』 16(2): 127-149.
- 김동일. 2017. “시민 의무의 정치철학적 기초 - 고전 자유주의와 시민루소고전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017.5 23(1): 9-29
- 김봉섭·김현철·박선아·임상수·정순원·박선아·김영애.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에 대한 탐색』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상돈. 201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 나타난 권리중심 정치의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에 근거한 덕(德) 정치의 가능성”. 『인문학논총』 34: 459-492.
- 김상범. 2012. “공화주의적 시민성의윤리교육적 함의”. 『윤리연구』 87: 27-52.
- 김상현·김희용. 2010.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공화주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41: 207-22.
- 김윤태. 2013. “토마스 험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 『담론201』 16(1): 5-32.
- 문지영. 2009. 『자유』 서울: 책세상
- 박순우. 2004. “T. H. Marshall의 시민권론의 재해석”. 『사회복지정책』 20: 87-107.
- 설한. 2015. “다원주의 사회의 민주적 시민권 - 권리와 의무”. 『21세기정치학회보』 25(4): 87-110.
- 성낙환. 2010.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 합성생물학”. LG 경제연구원. in.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6536> (검색일: 2017. 09. 12)
- 손화철. 2017.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자리: 리다이트 운동의 교훈”. 손화철 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17-36. 서울: 북바이북
- 에릭 브리놀프슨·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2014. 『제2의 기계 시대 -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서울: 청림출판.
- 에릭 브리놀프슨·앤드루 맥아피·마이클 스펜스. 2016. “세계를 지배할 새로운 질서”. 클라우스 슈밥 외 26인. 2016.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서울: 흐름출판사 133-148.
- 월 김리카 저. 장동진·장휘·우정열·백성욱 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과주시: 동명사
- 이근식. 2009. 『상생적 자유주의-자유, 평등, 상생과 사회발전』 과주: 돌베개.
- 이남희. 2013. “민주주의와 성별정치학 - 영국 여성참정권의 확대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7: 133-167
- 장미경. 2001. “시민권 개념(citizenship)의 의미 확장과 변화 -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35(6): 59-77.
- 정원호·이상준·강남훈.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세종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인경. 2015. “과학 거버넌스와 과학 시민권: 이론적 검토”. 『한국정치연구』 24(2): 335-361.
- 정태창. 2013.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의 딜레마”. 『철학사상』 47: 125-160.
- 제러미 리프킨 저. 안진환 역. 2012. 『3차 산업혁명 -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

- 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민음사.
- 조승래. 2014.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자유주의를 넘어서』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일수. 2011.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아테네적 전통과 로마적 전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80: 291-316.
- . 2011. “자유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82: 1-24.
- 조효제. 2015. “애국주의/국가주의 대 인권”. 『내일을 여는 역사』 58: 118-129.
- 최현. 2008. 『인권』 서울: 책세상.
- 웬틴 스키너. 2007. 『웬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서울: 푸른역사.
- 클라우스 슈밥 저. 송경진 역 2016,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 필립 페티트 저. 광준역 역. 2012. 『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파주: 나남.



## Non-Korean References

- Allen, Katie. 2015. "Technology Has Created More Jobs Than It Has Destroyed, Says 140 Years of Data." *The Guardian*, August 18, 2015.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5/aug/17/technology-created-more-jobs-than-destroyed-140-years-data-census>.
- Baweja, Bhanu, Paul Donovan, Mark Haeefe, Lutfey Siddiqi, and Simon Smiles.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 Frey, Carl Benedikt and Michael A. Osborne.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254-280.
- Goos, Maarten, Jozef Konings, and Emilie Rademakers. 2016. "Future of Work in the Digital Age: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Yearly Report on Flexible Labor and Employment, flexibility@work2016*, KU Leuven and Utrecht University. <https://www.randstad.gr/ugc/wf360/Randstad-Flexibility@work-2016.pdf>.
- Honohan, Iseult. 2002. *Civic Republicanism*. Oxford and New York: Routledge.
- Schwab, Klau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Global Agend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Skinner, Quentin. 1992. "On Justice, the Common Good and Priority of Liberty." In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Pluralism, Citizenship, Community*, edited by Chantal Mouffe, 211-224. London: Verso.
- Walzer, Michael. 1998. "Michael Sandel's America." In *Debating Democracy's Discontent: Essays on American Politics, Law, and Public Philosophy*, edited by Anita L. Allen and Milton C. Regan, 175-18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 Accessed 20 September 2017.
- . 2017.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http://www3.weforum.org/docs/GRR17\\_Report\\_web.pdf](http://www3.weforum.org/docs/GRR17_Report_web.pdf). Accessed 20 September 2017.
- Young, Iris Marion.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국문참고문헌의 영문표기  
(Korean Reference in Roman Alphabet)

- Cho Il-soo. 2011. "A Study on Liberalistic Citizenship.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82: 1-24
- . 2012. "A Study on Republican Citizenship -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Athenian Traditions and Roman Traditions.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80: 291-316.
- Jang Mi-kyoung. 2001. "The Enlargement and Change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Beyond the Concept of Liberal Citizenship.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5 (6): 59-77.
- Jung Tae-chang. 2013.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the Dilemma of Republicanism.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47: 125-160.
- Kim Dong-il. 2017. "Political Philosophy of Civil Duty - Focusing on Classical Liberalism and Civic/Rousseauian/Classical Republicanism.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23 (1): 9-29.
- Kim Sang-don. 2014. "The Limits of Rights-based Political Philosophy in the Debates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and the Possibility of Virtue-based Political Philosophy Using Aristotle's Friendship. *The Journal of Humanities* 34: 459-492.
- Kim Yun-tae. 2013. "A Reexamination of the Citizenship Theory of Thomas Humphrey Marshall: The Dynamics of Social Right, Politics and the Welfare State. *Discourse* 201 16 (1): 5-32.
- Lee Nam-hee. 2013. "Democracy and Gendered Politics: Rethinking the Issues for and against Women's suffrage in Britain. *YŎKSA WA HYŎNSIL* (87): 133-167.
- Pettit, Philip. Kwak, Joon-yeak(trasns). 1999.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uhl Hahn. 2015. "A Study on Democratic Citizenship in a Pluralist Society: Rights and Duties.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5 (4): 87-110.